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



2025. 4. 14. - 11. 15.



대 상

녹취록(綠取錄)

▶ 정혜원, 서지우, 이예선



리포트

농촌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재 때문일까?

영 상

소각소각
: 우리의 팩트체크 일대기



각오한마디



우리 환경을 올바로 바라볼 녹색 취재기를 써내려갈 '녹취록' 팀입니다. '녹취록'은 환경을 뜻하는 '녹색'과 '취재록'의 합성어로, 농촌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듣고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학부에서 언론정보를 전공한 두 명과 방송영상뉴미디어를 전공한 한 명, 총 동기 세 명이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일상 속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문제의식', '궁금한 것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의지력', '상상을 콘텐츠로 전환하는 실행력'은 팀원들이 갖춘 핵심 역량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농촌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 역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의 원인을 단순한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재로 바라보지 않고 수거 기반과 고령화된 인프라, 구조적 소외 등의 맥락으로 접근합니다. 팩트체킹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을 능동적으로 비교하며, 그 실태를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팩트체킹은 그 어떠한 보도의 영역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널리즘에 있어서 완전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 조각들을 모아 진실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리함수가 좌표축에 무한히 가까워지듯, 저희는 팩트의 축 위에서 '거짓과 진실 사이의 간극'을 쉼 없이 계산하며 좁혀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확인을 넘어, 콘텐츠로 승화된 깊이 있는 팩트체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을 향한 질문, '녹취록'이 묻고, 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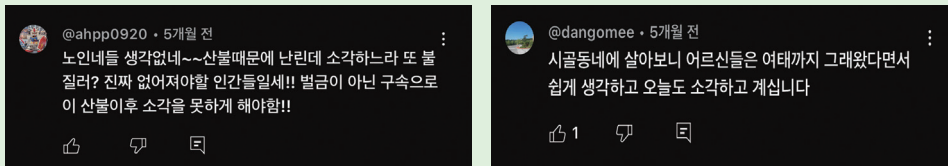
팩트체크 리포트

농촌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재 때문일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올해 3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가 함께 조명되었다.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농촌 쓰레기' 문제에 쏠리기 시작했다. 산림청의 <2024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23.5%가 소각에 의해 발생했다. 이 수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위험하다'는 판단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이 먼저 떠올랐다. "왜 태울 수밖에 없었을까?"



▲ 사진0. (MBC) <이 난리통에 '쓰레기' 소각 산불 낸 주민, '딱' 웃더니..>
유튜브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 일부.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는 '농촌은 환경의식이 낮다'는 프레임으로 종종 단정되곤 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주민들의 인식 부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현장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마주한 문제의 결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불법 소각'

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팩트체킹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기로 했다. 정말 태우는 이유는 무지 때문일까? 아니면,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닐까? 전북 남원시의 읍면 지역 367개 마을 가운데 생활쓰레기 배출장이 있는 곳은 78개(21.2%)에 불과하고, 영농폐기물 배출장이 있는 마을은 단 50개(13.6%)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다. 도시는 규칙적 수거 시간과 밀도 높은 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농촌은 수거 주기가 길거나 자체적인 차량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출을 위한 물리적 거리와 고령화는 가장 큰 장벽이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구조의 문제로 확장된다.

농촌의 쓰레기 문제는 '환경의식 부족'이라는 낡은 프레임이 아닌, 점점 주변화되는 지역과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다. 그렇기에 이 주제를 단순한 '불법 소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농촌이 점점 주변화되고 있는 지금, 농촌 쓰레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 격차와 고령화, 그리고 농촌이 도시만큼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다. 사람들이 말하는 '농촌의 환경의식 부족'이라는 익숙한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면, 문제는 거꾸로 드러난다. '태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는 과연 충분히 고민해왔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서론]

1. 언론은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는가?

1-1.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현황

- Bigkinds 뉴스 빅데이터 분석

→ 산불 발생 지역/지역 외 언론 & 쓰레기 소각&관련 보도추이 및 연관 검색어 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 김춘식 교수 인터뷰

[팩트체크]

2. 농촌 쓰레기 소각이 산불 발생 원인으로 제시된 통계는 타당하게 산출됐다?

2-1. 산림청 통계 분석

- 산림청 <2024 산불통계연보> → 산불 발생 원인 분석

2-2. 통계의 이면

- * 고덕근 전 소방공무원 인터뷰 → 산불 통계의 타당성 검증

3. 농촌 주민들은 환경의식이 낮다?

- * 도시 시민 인터뷰 → 농촌 주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인식 파악
- * 봉화군 원당리 주민 인터뷰 → 농촌 주민의 환경의식 조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 연구원 인터뷰

3-1. 농촌 주민 환경 의식 현황 (양적 접근)

- 한국환경연구원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 읍, 면 지역 농촌 주민과 도시민의 환경의식 비교, 양적 분석

3-2. 농촌 주민 환경 의식 현황 (질적 접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2024)>,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정책 요구> → 농촌 주민 환경의식, 질적 분석

4. 농촌 쓰레기를 처리할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4-1. 농촌 쓰레기의 특징

- 한국환경공단 <2023 영농폐기물조사> → 영농폐기물 특징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요약본)> → 생활쓰레기 특징

4-2. 농촌 사회의 특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 쓰레기 소각 이유

4-3. 전국(정부) 쓰레기 처리 제도 현황

- 한국환경공단 <2023 영농폐기물조사> →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실태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요약본)> →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4-4. 지역별 쓰레기 처리 제도 현황

- 청주시 문의면 쓰레기 처리 현황 → 한주현 외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농촌 생활쓰레기 및 농업폐기물 처리 실태>
- 봉화군 쓰레기 처리 현황 → 봉화군청 '봉화군 쓰레기장 현황'
- * 봉화군 주민 전 씨(54) 인터뷰
- 남원시 쓰레기 처리 현황 → 싱글벙글 비니루없는 점빵 '남원시 읍면 쓰레기 분리 배출장 현황'
- 옥천군 쓰레기 처리 현황 → 옥이네 <농촌 쓰레기수거 실태>

팩트체크 해보기

▶ 서론1. 언론은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는가?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한 분석에 앞서,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김춘식 교수와 채영길 교수에게 각각 자문을 구했다. 두 교수는 이번 연구의 문제 제기와 분석 접근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학술적 평가와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춘식, 채영길 교수 인터뷰

김춘식 교수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다양한 기사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려고 했던 점은 매우 잘한 점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러한 키워드를 선정할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선정된 키워드가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보도의 변화 추이나 계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며, “키워드가 기사의 헤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사의 본문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분석 방법의 세부 요소에 대한 보완점도 제시했다.

채영길 교수 역시 분석 방향성에 대해 “언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는

제도에서 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특히 원인이 사회적 약자 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다면 더더욱이나 주의해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연구 주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유의미한 방식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며 분석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두 교수의 조언을 반영해,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뉴스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되, 산불 발생 지역 언론과 발생 지역 외 언론을 구분하였다. 또한 ‘쓰레기 소각’ 키워드 선정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더했고, 1년 이상 기간의 기사 제목과 본문 모두를 검색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추가 분석 방법으로 김춘식 교수는 ‘내용 분석’을, 채영길 교수는 ‘토픽 모델링’을 각각 제안하였다. 내용 분석은 유목표 설계 등 보다 세밀한 코딩 작업이 요구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본 팩트체킹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프레임 분석이 가능한 ‘토픽 모델링’을 선택하였다. 교수들의 제언을 실행 단계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최종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1-1.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현황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언론 보도들이 ‘쓰레기 소각’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사들을 주제별로 나눠 분석하는 방식인 ‘토픽 모델링’을 활용했다. 사용된 방식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라는 알고리즘으로, 이 분석은 기사 속에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기사가 어떠한 주제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기법이다. 이렇게 도출된 하나의 주제는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며, 각 단어 옆에는 그 단어가 해당 주제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중치)가 함께 표시된다. 이 수치를 통해 어떤 단어가 특정 주제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단어는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이 어떤 내용을 강조했고, 어떤 맥락은 상대적으로 덜 다뤘는지를 정리하였다.

기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Bigkinds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1일 까지 1년 1개월의 기간 동안 뉴스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쓰레기 소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선정은 산림청의 <2024년 산불통계연보>에 기반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 원인 중 23.5%가 소각 행위로 확인되어, 쓰레기 소각은 산불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은 산불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때 타당한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키워드 기반 분석은 데이터화가 가능하므로, 팩트체킹에서 요구되는 실증적 접근과도 부합한다. 매체를 구분한 분석을 위해 데이터화 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보도 경향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해보았다. 이에 따라 산불이 실제로 발생한 지역 언론과 발생 지역 외 언론으로 나누어 수집하였고,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언론은 다음과 같다.

<p>산불 발생 지역 언론 (* 경상, 충청, 전라 지역 일간/주간지)</p>	<p>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금강일보, 경남일보, 영남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중도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울산매일, 울산신문, 광남일보, 중부매일, 경북일보, 광주매일신문, 충북일보, 경상일보, 광주일보, 충청일보, 국제신문, 남도일보, 충청타임즈, 대구신문, 대구일보, 무등일보, 충청투데이, 새전북신문,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당진시대, 흥성신문, 영주시민신문</p>
<p>산불 발생 지역 외 언론 (* 전국일간지/경제일간지/방송사/인터넷신문)</p>	<p>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OBS, SBS, YTN, EBN, PD-저널, 노컷뉴스, 뉴스핌, 뉴스핌, 데일리안, 브레이크뉴스, 비즈워치, 쿠키뉴스, 프레시안, 헬로디디, 대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브릿지경제</p>

▲ 표1. <산불 발생 지역/발생 외 지역 언론사 분류>

1) 산불 발생 지역 언론

산불 발생 지역(경상, 충청, 전라)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Bigkinds에서 수집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총 8개의 주제(Topic)가 도출되었다. 추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토픽	대표 단어 (가중치)	주제 해석
1	예방(0.034), 대책(0.031), 대응(0.026), 발생(0.023), 방지(0.021), 재난(0.016), 기간(0.016), 본부(0.016), 운영(0.015), 대형(0.014)	불법 소각 예방 및 영농 부산물 처리
2	예방(0.034), 대책(0.031), 대응(0.026), 발생(0.023), 방지(0.021), 재난(0.016), 기간(0.016), 본부(0.016), 운영(0.015), 대형(0.014)	재난 대응 및 예방 대책
3	화재(0.083), 발생(0.074), 피해(0.036), 소방(0.033), 최근(0.022), 부주의(0.021), 봄철(0.021), 원인(0.016), 방서(0.013), 재산(0.013)	화재 발생 및 피해 사례
4	쓰레기(0.041), 소각(0.040), 시설(0.036), 폐기물(0.025), 주민(0.025), 생활(0.021), 광주(0.015), 불법(0.014), 처리(0.014), 지역(0.014)	쓰레기 소각 시설과 주민 갈등
5	마을(0.032), 환경(0.030), 센터(0.015), 캠페인(0.015), 폐기물(0.013), 교육(0.013), 자원(0.012), 참여(0.012), 주민(0.012), 활동(0.011)	마을 단위 환경 캠페인 및 참여
6	자원(0.032), 시설(0.029), 쓰레기(0.018), 사업(0.017), 순환(0.015), 추진(0.015), 회수(0.014), 서산시(0.014), 재활용(0.013), 현수막(0.013)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정책
7	진화(0.034), 발생(0.028), 경북(0.021), 산림(0.018), 울산(0.018), 경남(0.018), 지역(0.016), 의성(0.014), 야산(0.013), 피해(0.012)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진화 및 피해
8	발생(0.039), 화재(0.038), 봄철(0.030), 소방(0.024), 예방(0.022), 날씨(0.020), 위험(0.017), 지역(0.016), 바람(0.016), 주의(0.015)	봄철 화재 위험과 예방 경고

▲ 표1. <산불 발생 지역/발생 외 지역 언론사 분류>



▲ 그림1. 토픽1의 단어들을 가중치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냄. 가중치가 큰 예방, 소각, 영농 등의 단어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불 발생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반적으로 ‘불법 쓰레기 소각’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토픽 1, 3, 8에서 ‘소각’, ‘예방’, ‘화재’, ‘부주의’ 등의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농촌 지역에서의 부주의한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보도가 다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사들은 대체로 봄철 건조한 시기, 불법 소각 금지 계도,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어, 사전 예방과 경고 중심의 보도 태도가 드러난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대응 활동도 언론 보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토픽 5, 6에서는 ‘마을’, ‘캠페인’, ‘참여’, ‘주민’, ‘자원’, ‘사업’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이는 언론이 단순히 화재 발생 사실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대응 체계, 소방 당국의 활동, 주민 참여형 캠페인 등 제도적 노력과 공동체 차원의 대응까지 함께 조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사들은 산불이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토픽 7에서는 ‘발생’, ‘피해’, ‘진화’, ‘야산’, ‘경북’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이는 산불 발생 이후의 피해 규모, 원인 분석, 진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보도들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들 보도에서는 특히 피해 상황이나 대응 방식이 중심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왜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게 되는가?”에 대한 맥락적인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쓰레기 소각을 산불과 연결해 위험성을 강조하는 보도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행위의 사회적·제도적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룬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2) 산불 발생 지역 외 언론

산불 발생 지역 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Bigkinds에서 수집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총 8개의 주제(Topic)가 도출되었다. 추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토픽	대표 단어 (가중치)	주제 해석
1	자원(0.020), 순환(0.013), 정부(0.012), 방문(0.012), 단체(0.012), 시장(0.011), 기관(0.011), 시설(0.010), 추진(0.010), 환경(0.009)	자원순환 정책과 기관 중심 활동
2	산불(0.131), 발생(0.032), 진화(0.021), 산림(0.020), 예방(0.020), 날씨(0.013), 대형(0.013), 봄철(0.013), 대책(0.012), 피해(0.011)	산불 관련 일반 보도
3	시설(0.030), 소각(0.026), 폐기물(0.020), 쓰레기(0.019), 후보(0.019), 주민(0.017), 처리(0.015), 입지(0.014), 공모(0.013), 사업(0.013)	폐기물 소각 시설 입지 선정 및 주민 갈등
4	쓰레기(0.052), 소각(0.038), 시설(0.026), 폐기물(0.024), 자원(0.023), 생활(0.019), 재활용(0.017), 사업(0.016), 배출(0.015), 매립(0.015)	생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정책
5	화재(0.051), 발생(0.032), 쓰레기(0.029), 소각(0.026), 소방(0.022), 봄철(0.018), 피해(0.017), 당국(0.016), 산림(0.015), 불법(0.015)	쓰레기 소각 시설 화재 및 불법 행위 관련 보도
6	사업(0.021), 환경(0.016), 올해(0.014), 한국(0.011), 탄소(0.011), 인천(0.011), 황성군(0.010), 행사(0.010), 마을(0.010), 폐기물(0.010)	환경·탄소 정책 중심의 행정 보도
7	현수막(0.044), 선거(0.023), 재활용(0.019), 쓰레기(0.015), 플라스틱(0.015), 무단(0.013), 청주(0.013), 조례(0.012), 투기(0.012), 총선(0.011)	선거 현수막 쓰레기 문제
8	지역(0.033), 영농(0.030), 전국(0.028), 부산물(0.027), 산불(0.026), 위기(0.018), 국가(0.015), 경계(0.015), 농촌(0.014), 단계(0.014)	봄철 화재 위험과 예방 경고

▲ 표3. <산불 발생 지역 외 언론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산불 발생 지역 외 언론도 산불 발생 지역 언론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토픽 2, 5에서는 ‘산불’, ‘소각’, ‘발생’, ‘불법’, ‘예방’, ‘영농’ 등의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쓰레기 또는 영농 부산물 소각이 산불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일부 보도에서 언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주로 화재 발생 시기인 봄철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의 위험성과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 촉구를 포함하고 있어, 예방적 경고 성격의 보도 태도가 일정 부분 나타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된 행정적 이슈나 제도적 대응도 보도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토픽 3, 4에서는 ‘시설’, ‘소각’, ‘주민’, ‘입지’, ‘처리’, ‘사업’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는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이나 주민 반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대한 보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보도는 쓰레기 소각이 환경 문제나 지역 내 공공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 1, 6에서는 ‘자원’, ‘순환’, ‘탄소’, ‘행사’, ‘기관’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자원순환 정책, 탄소중립 사업, 환경 캠페인 등의 보도 속에서 소각 문제가 간접적으로 다뤄졌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쓰레기 소각은 정책 추진이나 제도 설명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산불 발생 지역 외 언론 또한 ‘쓰레기 소각’ 문제를 산불 예방과 연결짓는 보도뿐 아니라, 행정 갈등, 자원순환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선 산불 발생 지역 언론과 동일하게 주민 개인의 소각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구체적인 생활적 이유나 제도적 한계에 대한 키워드는 주요 토픽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 서론에 대한 결론

-> ‘쓰레기 소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산불 발생 지역 언론과 그 외 지역 언론의 보도를 각각 분리하여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유형의 언론 모두 쓰레기 소각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도하며, ‘예방’, ‘부주의’, ‘불법’, ‘주의’, ‘피해’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경고 및 계도 중심의 보도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각장 설치나 폐기물 처리 문제 등 행정적 갈등이나 제도적 대응 관련 보도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민 개개인이 쓰레기 소각을 선택하게 되는 구체적인 생활 여건이나 사회적 배경

(예: 수거 인프라 부족, 고령화,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의 보도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토픽 모델링에서 해당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예: '처리 비용', '인프라', '고령화' 등)는 주요 주제로 도출되지 않았으며, 주민의 '의도'나 '생활 조건'에 대한 다층적 서술보다는 '불법' 여부와 결과 중심의 보도 키워드가 우세했다.

개별적인 보도사례로 <(한국일보)산불 위험에 '불법 소각 절대 금지'?... "버릴 곳 없는데 어떡하나요">, <(경향신문) 버릴 곳도 옮길 사람도 없다...농촌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이유> 등을 찾아볼 수는 있었으나, 일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쓰레기 소각을 산불의 원인으로 연결 지어 경고와 단속 중심의 보도를 강화해왔지만, 해당 행위의 발생 배경이나 주민의 생활 조건 등 맥락적 요소는 경고와 단속 중심의 보도만큼은 조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팩트체크1.

농촌 쓰레기 소각이 산불 발생 원인으로 제시된 통계는 타당하게 산출됐다?

산불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농촌의 쓰레기 소각. 매년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불통계 연보는 농촌의 쓰레기 소각이 산불의 주된 원인임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산림청의 통계가 농촌 쓰레기 소각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산림청의 산불 통계에 대한 분석과 통계가 포착하지 못한 쓰레기 소각의 숨은 맥락을 파악해 산림청 통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그림2.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산림청

2-1. 산림청 통계 분석

표는 올해 산림청에서 제공한 <2024 산불통계 연보>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주요 산불 원인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31%), 논·밭두렁소각(11%), 쓰레기 소각(13%), 담뱃불 실화(7%), 성묘객 실화(3%) 등으로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입산자 실화(18%), 논·밭두렁소각

(9%), 쓰레기 소각(10%), 담뱃불실화(13%), 성묘객 실화(2%) 등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2-2. 통계의 이면

하지만 산림청의 통계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존재한다. 바로 &쓰레기 소각&의 정의이다. 통계를 보는 독자들은 쓰레기 소각의 주체도, 쓰레기 소각을 분류하는 기준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2018년 안성소방서장, 2022년 제12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역임한 고덕근 전 소방공무원의 인터뷰에서 쓰레기 소각 통계에 담긴 이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고덕근 전 소방공무원 인터뷰

Q1. 쓰레기 소각의 문제는 과거부터 쪽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쓰레기를 소각하는 비율이 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사실 조금 줄어들었어요.

Q2. 그렇다면 쓰레기 소각이 예년보다 줄어든 건가요?

->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화재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그런 화재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이 줄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안성시 같은 데만 보더라도 과거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촌과 소형 공장들이 혼재해 있는 도농복합지역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제조업 같은 공장 같은 데에서 쓰레기나 이런 야적물을 밖에다 야적을 해놓는 거죠.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에서 이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제외한 순수 농민들이 농업 부산물이나 이런 거 태우는 거는 현저하게 줄었죠.

-> 그래서 이 제조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체 공장들이 농촌 지역에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들어와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야적물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들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분류해서 통계를 내다보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줄지 않은 거예요. 다만 쓰레기장 화재하고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화재는 많이 줄어들었죠.

위 인터뷰에 따르면, 도농복합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농민이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제조공장에서 야적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모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 및 인구현황> 중 행정 구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중 읍·면과 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행정구역은 안성시와 마천가지로 도시와 농촌 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도농복합지역에 해당한다. 도농복합지역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시와 주변 군이 통합되면서 전국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도농복합지역은 총 54개다. 즉, 전국 54개의 지역이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그것이 농민의 쓰레기 소각인지, 혹은 제조시설의 야적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산림청에 함께 집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구분 시·도·별	시·군·구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출장소							
	계	시	군	구	시	구	계	읍	면	동	계	시	도	시	군	읍	면
계(17)	226	75	82	69	2	35	3,522	235	1,176	2,151	83	9	12	2			
서울특별시	25			25			426			426							
부산광역시	16	1	15				205	4	1	200	1			1			
대구광역시	9	2	7				150	7	10	133	2						2
인천광역시	10	2	8				156	1	19	136	6	1	1	4			
광주광역시	5		5				96			96	1	1					
대전광역시	5		5				82			82							
울산광역시	5	1	4				55	6	6	43	1	1					
세종특별자치시							24	1	9	14							
경기도	31	28	3			20	604	37	102	465	7	1	4	2			
강원특별자치도	18	7	11				193	24	95	74	7	1		6			
충청북도	11	3	8			4	153	16	86	51	5	3		2			
충청남도	15	8	7			2	208	25	136	47	5	1	1	3			
전북특별자치도	14	6	8			2	243	15	144	84							
전라남도	22	5	17				297	33	196	68	27		1	26			
경상북도	22	10	12			2	322	38	192	92	14		1	13			
경상남도	18	8	10			5	305	21	175	109	7		3	4			
제주특별자치도				2			43	7	5	31							

주 : ① 특별시(1), 광역시(6), 특별자치시(1), 도(6), 특별자치도(3) * 전북특별자치도('24.1.18. 시행)
② 공무원: 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제외

▲ 그림3. 2025년 행정구역 현황. 행정안전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농민의 쓰레기 소각과 제조시설의 야적물 소각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산림청에게 독자가 오해하지 않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산림청의 통계는 국민에게 정론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과 같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산불의 원인을 농촌의 쓰레기 소각으로만 단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앞서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언론은 농민의 쓰레기 소각과 산불을 연관 짓는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단편적 정보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의 부정확한 통계 표현은 국민의 오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농민의 영농폐기물 소각' 또는 "제조 공장의 야적물 소각"처럼 구체적인 주체와 내용을 산불의 원인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오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산림청의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농민의 쓰레기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전직 소방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쓰레기 소각'으로 분류되는 화재 중 일부가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소각이 아닌, 도농복합지역의 소규모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야적물 소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증명되었다. 따라서 "농민의 쓰레기 소각이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 제시된 통계는 타당하게 산출됐다?"는 사실이 아니다.

▶팩트체크 2.
농촌 주민들은 환경의식이 낮다?



▲ 사진1. 녹취록 팀원들이 광화문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농촌 쓰레기 소각

은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재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명이 ‘예’에, 39명이 ‘아니오’에, 1명이 ‘모르겠음’에 응답했다. 가벼운 사전 탐색 차원의 설문이었지만, 도시 시민들이 농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나, ‘예’라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시골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있다”, “쓰레기를 태우는 행동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농촌의 ‘쓰레기 소각’은 매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의 19%가 소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농촌 주민들은 왜 쓰레기를 소각하는가? 일부 도시민의 언급대로 쓰레기 소각의 문제를 모르거나 환경의식이 낮은가? 언론 보도가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를 농촌 사회의 책임으로 환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질문들이다. 농촌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는지, 도시민과 비교했을 때 농촌주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환경의식은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와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살펴보겠다.

3-1. 농촌 주민 환경 의식 현황 (양적 접근)

농촌 주민의 환경 의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접근 먼저 살펴보겠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농촌’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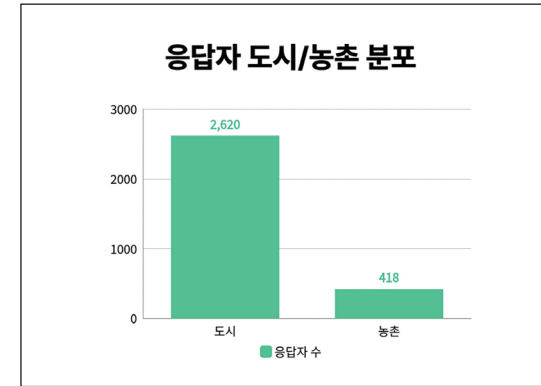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이에 따라 읍·면 거주자인 농촌 주민과 동 거주자인 도시민의 인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찾았고, 원자료를 재코딩해 두 집단의 응답을 추출하기로 결정했다. 코딩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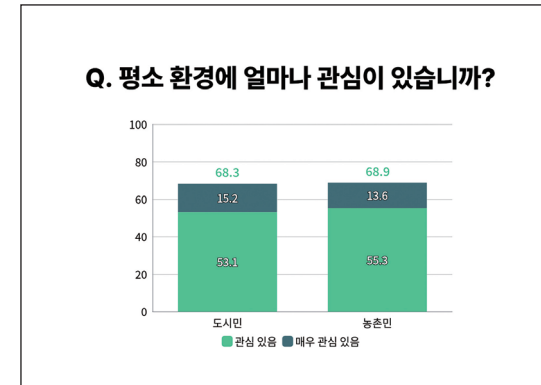
1) 응답자 분포



▲ 그림4. 한국환경연구원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도시/농촌 응답자 분포 현황

기존 원자료 응답자 총 3,040명 중 2,620명(86.2%)이 도시민에 해당했고, 418명(13.8%)이 농촌 주민에 해당했다. (기타 2명은 출장소에 해당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가 농식품통계서비스(KASS)의 농촌(읍·면) 인구이동 현황 2025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촌(읍·면) 인구는 약 923만 명으로 18.06%이며, 도시 인구는 81.94%를 차지하므로, 위 응답자 분포는 모집단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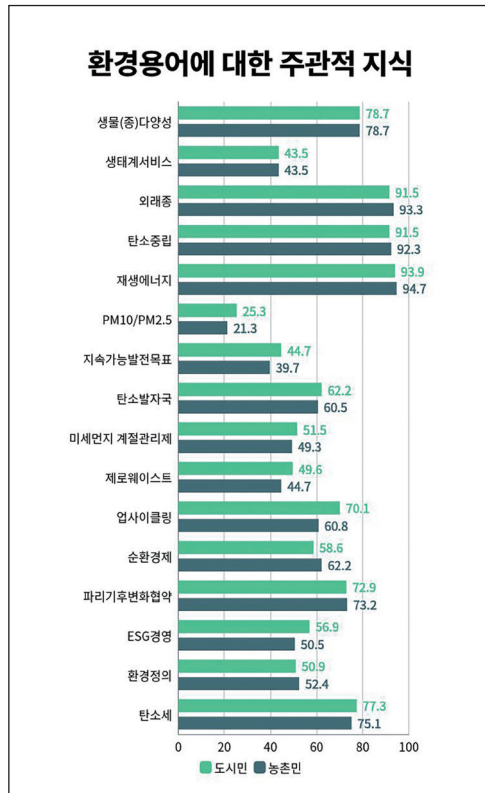
2)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 그림5. A1 문항,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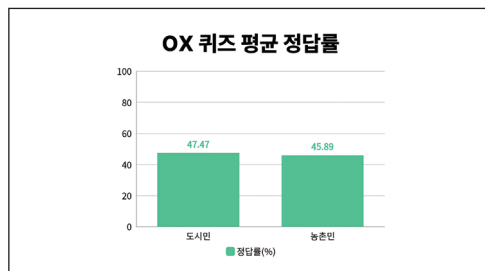
응답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물어보는 A문항(A1~A3)의 답변 결과를 보았을 때, 농촌 주민들과 도시민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귀하는 평소 환경 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를 묻는 A1 문항에서 ‘관심이 있는 편이다’와 ‘매우 관심이 있다’를 답변한 비율은 농촌 주민(68.9%), 도시민(68.3%)으로 근소한 차이로 농촌 주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문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A2 문항에서도 ‘아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안다’를 답변한 비율은 농촌 주민(50.0%), 도시민(49.5%)으로 농촌 주민이 약간 높았다. 환경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A3 문항 또한 ‘아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안다’를 답변한 비율은 농촌 주민(37.8%), 도시민(39.8%)으로 도시민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3) 환경용어에 대한 주관적 지식



▲ 그림6. A6 문항, 환경용어에 대한 주관적 지식

A6 문항(다음 제시하는 용어 각각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용어인지 아닌지 응답해주시오)을 통해 두 집단의 환경 용어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 주요 환경 용어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주관적 지식을 보였으며, 일부 용어에서만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생태계 교란생물/외래종’,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용어는 도시민(각각 91.5%, 91.5%, 93.9%)과 농촌 주민(각각 93.3%, 92.3%, 94.7%) 모두 90% 이상의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업사이클링’ 용어는 도시민(70.1%)의 인지도가 농촌 주민(60.8%)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 문화와 관련된 용어에서 도시민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순환경제’는 농촌 주민(62.2%)이 도시민(58.6%)보다 인지율이 약간 높았고, ‘ESG경영’은 도시민(56.9%)이 농촌 주민(50.5%)보다 높았다. ‘PM10/PM2.5’는 도시민(25.3%)과 농촌 주민(21.3%) 모두에게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 그림7. A7 문항, 환경용어에 대한 객관적 지식

A6 문항(다음 제시하는 용어 각각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용어인지 아닌지 응답해주시오)을 통해 두 집단의 환경 용어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 주요 환경 용어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주관적 지식을 보였으며, 일부 용어에서만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생태계 교란생물/외래종’,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용어는 도시민(각각 91.5%, 91.5%, 93.9%)과 농촌 주민(각각 93.3%, 92.3%, 94.7%) 모두 90% 이상의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업사이클링’ 용어는 도시민(70.1%)의 인지도가 농촌 주민(60.8%)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 문화와 관련된 용어에서 도시민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순환경제’

4) 환경용어에 대한 객관적 지식

응답자를 대상으로 환경 용어 관련 OX 퀴즈를 실시한 A7 문항(총 n개의 퀴즈로 구성되어 있음)을 통해 객관적 지식을 알 수 있었다. 정답률을 통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환경 지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두 집

단은 유사한 정답률 추이를 보였다.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평균 정답률은 각각 47.47%와 45.89%로, 도시민이 1.58%p 더 높게 나왔다.

먼저,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들에서는 두 집단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생물(종)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명제에 대해 도시민의 75.9%, 농촌 주민의 76.3%가 정답인 ‘O’를 선택했다. 또한, ‘업사이클링’ 관련 문항에서는 도시민의 73.3%, 농촌 주민의 71.5%가 정답을 맞혔다. ‘순환경제’ 관련 문항 역시 도시민의 65.1%, 농촌 주민의 68.9%가 정답을 맞혔다.

반면, 일부 문항에서는 정답률 차이가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문항에서는 도시민의 정답률(‘X’ 선택, 23.5%)이 농촌 주민(‘X’ 선택, 19.9%)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명제에 대해 정답인 ‘X’를 선택한 도시민의 비율(50.1%)이 농촌 주민(43.8%)보다 높았다.

두 집단 모두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도 있었다.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해 정답인 ‘O’를 선택한 도시민은 24.5%에 불과했으며, 농촌 주민은 27.0%에 그쳤다. 특히, ‘탄소세’ 관련 문항에서는 정답인 ‘X’를 선택한 도시민의 비율이 16.4%, 농촌 주민의 비율이 13.6%로 두 집단 모두 정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3-2. 농촌 주민 환경 의식 현황 (질적 접근)

1) 경북 봉화군 주민 인터뷰



▲ 사진2. 녹취록 팀원들이 봉화군 원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6명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OX 퀴즈를 진행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땅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를 묻자 모두 ‘X’로 답하는 모습.

경북 봉화군을 방문하여 농촌 주민에게 환경의식과 지식을 묻는 간단한 OX 퀴즈를 실시 해보았다. 먼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나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 “비닐봉지나 일회용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려고 한다”, “우리 마을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다.”와 같은 항목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일관되게 ‘O(그렇다)’를 선택했다. 단, “종량제 봉투 사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질문(6번)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O(그렇다)”로 응답하며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80대 주민 A씨는 “이놈 하나 버릴게네.(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넣기 위해 가지고 그거 사는 건 안 아까워.”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 내기도 했다.

다음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서도 주민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과 산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에 대해서는 모두 ‘X(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소각과 산불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기 전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알고 있다”, “불을 피우고 나서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다.” 등 실천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O(그렇다)’로 답해, 환경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책임 있는 행동 의지를 동시에 갖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콩대나 벧짚 등을 태우는 게 환경에 좋다고 생각한다.”에 모두 ‘X(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불 나. 불 나.”, “그거는 그런데 불조심 때문에 그래”라고 부연하며 소각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2) 농촌 초점집단토론(FGI) 연구

경북 봉화군 외에도 전국 각지의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점집단토론(FGI) 연구 자료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전반적 환경의식 현황’을 질적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 단토론 자료(2024)>와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정책 요구(2025)>를 확인해본 결과,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환경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표 4) 초점집단토론에서 논의된 주제: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변화와 경험

주제	전체	여성		남성						
		20~30대 여성	30~40대 여성	30~40대 남성	50대 이상 남성					
학교 교육 관련 (중·고교, 학원)	74	8	10	10	4	7	5	12	13	5
마을(리) 활동	72	17	3	6	12	17	5	4	2	6
노인 돌봄	59	11	3	1	26	8	4	0	2	4
임상·생활 소비 (상점 음식원, 이용실 등)	57	5	7	14	9	8	3	2	4	5
농업	53	5	2	0	5	5	8	8	15	5
읍면 지역 사회 조직 활동	51	8	5	5	3	5	4	4	10	7
대중교통	50	3	5	14	9	2	2	3	6	6
행정 (자세해 질량사업 및 서비스)	46	0	2	11	6	9	9	6	1	4
마을의 인구 구성	44	7	1	5	7	13	1	3	1	6
입자리	38	4	3	7	2	2	4	6	4	6
환경 관련(민원, 마을 환경 및 경관, 소각기, 유해시설)	34	8	11	0	6	1	0	7	0	1
보건의료 (병의원, 보건소, 약국)	31	2	6	4	3	-	3	6	4	3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27	1	6	5	3	4	3	3	1	1
문화 여가 (도서관, 청소년센터, 공연)	20	1	4	3	1	4	4	1	0	2
가족관계	18	3	2	3	1	2	3	0	4	0
농업의 전망·양·연계 산업 (사업 지원 서비스)	13	4	0	0	1	1	0	1	2	4
차량	9	2	1	3	1	1	0	0	1	0
정치·지역의 소외	9	0	0	5	0	0	0	0	2	0
주거 및 주거예	9	3	0	0	0	3	1	0	2	0
다문화가족	7	0	2	0	1	0	2	1	0	1
비농업 부문 노동력	6	0	0	1	0	2	2	0	1	0
세대 간의 관계	4	0	0	2	1	0	0	1	0	0
관광	4	0	0	0	0	0	1	0	3	0
소방	2	0	1	0	0	0	0	0	1	0
계	739	92	74	99	101	94	64	70	79	66

주: 숫자는 각 초점집단토론에서 해당 주제를 언급한 텍스트 의미 단위(chunk)의 빈도를 적은 것이다.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은 각 초점집단토론 기대빈도를 초과하여 텍스트 의미 단위가 출현한 주제이다. 자료: 저자 작성.

▲ 그림8.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정책 요구(2025)>

좌측 그림은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정책 요구(2025)>에서 초점집단토론(FGI) 과정 중 자주 언급된 주제들을 시각화 한 표이다. 숫자는 각 초점집단토론에서 해당 주제를 언급한 텍스트 단위의 빈도를 적은 것으로, 음영처리 된 부분은 기대 빈도를 초과하여 텍스트 의미가 출현한 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기대빈도 이상의 초점집단 참가자가 환경·경관(빈집, 마을 환경 및 경관, 쓰레기, 유해시설)의 문제를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생활 전반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체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 한숙영, 충남 홍성군, 여성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이나면 거점이라는 거예요.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거점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마을회관 까지만에 안 온다. 한두 포인트밖에 안 온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다니는 동 선 안에 있는 집들은 집 앞에 내놓으면 도시에서 그렇듯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두 포인트 정도만 마을에 장소를 두니까, 거기까지 이 고령화된 인구들이 쓰레기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 하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그때그때 또 태우시는 거죠, 마당에서.”

→ 황철수, 충남 홍성군, 남성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 4년째 사는데 일단 쓰레기 모아서 이렇게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희 집하고 가까운 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밑에서 수거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 위쪽 동네가 집이 원래 한 채 있었는데 네 채로 늘었거든요. 근데도 깊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안 오시더라고요. 이유는 정확히 설명안 해 주시지만. 그리고 횡수도 일주일에 두 번, 1.5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번으로 줄고. 그게 있었어요”.

→ 정은지, 전북 완주군, 여성

“이게 일주일이라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제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놓고 하니깐 근데 그나마 그거는 주 1회도 괜찮은데 음식물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안 가져가기 때문에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다가 버리고 올 수는 없는 거 양심상의 문제라.”

위와 같은 증언은 농촌의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수거 지점 부족, 방문 횡수 축소, 고령화에 따른 이동 한계, 영농폐기물의 무게와 처리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민들이 소각에 의존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쓰레기 소각은 개인의 태만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기보다는, 제도와 구조의 결핍 속에서 발생하는 생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2024)>와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정책 요구(2025)> 연구를 진행한 김 연구원으로부터 농촌 주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 연구원 인터뷰

Q1. 농촌 주민들이 환경의식이 낮은가요? 이들의 환경의식 부재가 쓰레기 소각으로 이어져 산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라는 보고서를 쭉 찾아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와 관련해서 환경 보존 행동 실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 문항이 뭐냐 하면, ‘나는 재활용품을 깨끗이 해서 분리 배출한다’에 대해 그렇게 한다, 하지 않는다로 응답하게 돼 있죠. 자료에 보면 직업별 응답 결과가 있는데, 농림어업인 집단의 경우 ‘깨끗이 해서 잘 한다’고 답한 비율이 82.8%였습니다. 전체 6개 직업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가장 높은 건 가정주부였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응답을 농촌의 결과라고 본다면,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실천 측면에서 농촌 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도시 주민에 비해 떨어진다고 말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 ‘환경 의식이 부재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환원하는 접근은 맞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됐을 가능성이 큼니다.

Q2. 연구원님께서 진행하신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정책 요구(2025)>를 살펴보면, FGI 과정에서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기대 빈도 이상으로 출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질적 자료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 이게 어떤 근거 자료냐 하면, 누군가 농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환경 의식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라고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FGI가 뭐냐 하면, 미리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전제한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살면서 느끼는 문제점, 특히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 때문에 생겼다고 여기는 문제점이 뭐든 좋으니 얘기해 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도 예상 못했는데, 환경 문제를 꽤 많이들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농촌 주민들의 환경 의식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2번 문항에 대한 결론

→ 양적 분석 결과,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원자료를 읍·면과 동 거주자로 재코딩해 비교했을 때 농촌 주민과 도시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주관적 지식 정도, 객관적 지식 정답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문항에서는 농촌 주민이 도시민 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팩트체크 3.

농촌 쓰레기를 처리할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4-1. 농촌 쓰레기의 특징

한국 농촌은 지난 수십 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영농 기술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며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은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독특하고 복합적인 특성 및 관리상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농촌 쓰레기 관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수성은 지역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도시에 비해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관리 대상 면적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진다. 즉, 시장의 실패이며 이로 인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은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농촌 쓰레기를 주요 폐기물 유형인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그리고 영농부산물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생활쓰레기

농촌 지역 가정이나 마을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 음식물쓰레기이다. 농촌도 도시와 같이 비슷한 유형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이 요구된다. 불법 소각이나 투기는 금지된다. 그러나, 배출 경로의 한계로 인해 농촌에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인구가 산재되어 있어 쓰레기장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기 어려우며, 가가호호의 문전 수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처럼 정교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어렵기에, 한 번의 배출을 위해서 2-30여 분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영농 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드물지 않게 개별적인 소각으로 이어진다.

2)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은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고유한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생활 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와는 발생원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

주는 농촌 쓰레기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농업용 비닐, 폐농약용기, 차광막 등이 있으며,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될 경우 환경 오염의 위험이 있다. 영농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이다. 폐농약용기는 농약의 잔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 및 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폐비닐은 하우스용 비닐(투명), 멀칭용 비닐(흰색, 검은색) 등 재질과 색상에 따라 구분되며, 특히 멀칭용 비닐은 재활용이 어려워 농번기에 다량으로 발생하고 그 무게가 상당하다. 때문에 차량이 없거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체적인 처리가 어렵다.

질적 분석 역시 결론을 강화한다. 봉화군 현장 조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초점집단 토론(FGI) 결과, 농촌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서 환경·경관 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 지점 부족, 방문 횟수 축소, 고령화로 인한 이동 한계, 영농 폐기물의 무게 등 구조적 제약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으며, 이는 소각 행위가 환경의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김정섭 선임 연구원 또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단순히 낮다고 환원하는 접근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농촌 주민과 도시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의식이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농촌 주민은 환경의식이 낮은가?”는 사실이 아니다.

3) 영농부산물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수확 후 남은 생물성 부산물로,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의 줄기나 짚, 그리고 과수 전정지 등을 의미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또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불법 소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영농부산물 또한, 특정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영농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이동수단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일괄적인 처리가 힘들다. 관행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방치되었다가 다음해 농작을 위해 밭과 함께 갈아 자연적으로 처리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4-2. 농촌 소각의 특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리기 힘들고 귀찮아서'(영농부산물 33.6%, 영농폐기물 32.2%, 생활쓰레기 25.7%)다. 이는 농촌 사회의 열악한 폐기물 처리 인프라와도 관련이 깊다. 응답자의 16.7%는 마을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보관 장소가 아예 없다고 답했으며, 보관 장소가 있어도 9.5%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물 수거 차량이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곳은 89.9%로 높지만, '주 1회 미만' 운행한다는 응답이 24.6%에 달하는 등 운행 빈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이 늘고 있는 추세로 농촌의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배출이 힘들어 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쓰레기 소각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긍정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민들은 응답자들은 쓰레기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52.3%가 긍정)보다 자진 반납 시 지원금 제공(72.9%가 긍정)이나 소각 가능/불가능 쓰레기 구분 교육(84.3%가 긍정) 등 실질적 지원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 제도의 강화와 지원책 마련을 통해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3. 전국(정부) 쓰레기 처리 제도 현황

1)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한국환경공단의 <2023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23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290,017톤으로 22년도 발생량 314,507톤 보다 7.8%(24,409톤) 감소하였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멀칭용 LDPF 비닐 발생량이 150,724톤(51.9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22년도 발생량 75,649,554개 보다 2.4%(1,827,296개) 감소하였다. 또한, 수거량은 81,475,076개로, 22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이전에 처리되지 못했던 농약병들도 함께 처리되며 한 해의 발생량을 넘어선 107.7%의 수거율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폐비닐이다. 영농폐비닐은 발생량과 수거량 사이의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23년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200,903톤으로, 22년 수거량보다 1.3% 감소하였고, 발생량의 약 69.27%만 수거된 셈이다. 재활용량 또한 161,193톤으로 22년보다 10.7%나 감소하였다. 이는 매년 수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농장 주변에 방치되거

나 불법 소각 및 매립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요약본)>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폐기물 총 발생량은 1억 7,619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전체의 47.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건설폐기물은 36.5%, 생활폐기물은 9.5%를 각각 차지했다. 생활폐기물은 23년 전국에서 2,242만 톤이 발생했으며 22년 2,304만 톤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서는 재활용이 5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소각은 24.8%, 매립은 10.7%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0.87kg이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수도권 외 내륙 지역에서는 0.9~1kg 수준을 넘어서며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발생량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7%로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했다. 충청남도(11.4%)와 경상북도(1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지역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42.9%를 차지하며, 농어촌과 공업단지가 함께 분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4. 지역별 쓰레기 처리 제도 현황

1) 청주시 문의면 쓰레기 처리 현황

한주현 외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농촌 생활쓰레기 및 농업폐기물 처리 실태>를 통해 청주시 문의면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시기는 2018년, 조사대상은 청주시 문의면 소재 4개리의 8개 마을 내에 거주하는 약 304가구다. 문의면은 최근 8년간 2018년 4330명에서 2025년 3575명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으로, 올해 8월 기준 고령화율 47.4%를 기록한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마을 인원과 구성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당시와 현재 쓰레기 배출 방식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대상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마당, 빈터, 등에 두엄을 만들어 이곳에 모아두고 퇴비

로 활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6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가구도 14.7%를 차지했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거차를 이용해 1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구 비율은 고작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각종 농기계, 농업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유 수거통을 설치한 곳은 8개 마을 중 단 2곳 뿐이었다. 2곳의 폐유 수거통은 모두 마을회관 앞에 설치돼 있었지만 마을의 공동 폐유 수거함을 이용하는 가구는 10.3%에 그쳤다. 일부 가구는 땅에 묻거나(8%), 하수도에 흘려보내는(5%)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면 마을의 마을회관 주변에는 모두 폐농약병(봉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 가구의 22.1%는 일정하게 버리는 곳이 없어서 집안 빈터에 적당히 모아두고 있었다. 또한 기타 17.5%의 대부분이 농약 살포 후 빈 병이나 봉지를 밭 주변 등에 방치하고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39.6%의 가구가 폐농약병(봉지)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용 폐비닐 처리의 경우 2018년 조사 당시 조사대상 8개 마을 가운데 단 1곳만 정해진 수거 장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개의 마을은 일정한 수거 장소가 없었다. 이들 마을은 각 가구에서 발생된 농업용 폐비닐을 집에 모아두었다가 이듬해 3월 초 마을 도로변 등에 모아두면 수거 차량이 수거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64.4%는 수거 장소인 도로변, 빈터 등에 버리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버리는 시기와 장소를 몰라 사적 공간에 모아두고 있는 가구도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봉화군 쓰레기 처리 현황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봉화군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 홈페이지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구입/부탁하여 배출해야 한다. 5톤 미만의 일시적 다량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처리 수수료 납부 후 직접 봉화매립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일반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 이외에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해 재활용

구분	설치년도	설치개수	건물명	주소	비고
계		97			
1	2012	3	촌양모아글로빌	촌양면 촌양로 255-27	
2			거촌3리(그린마을)	봉화읍 거촌리 909	
3			목화가든아파트	봉화읍 거촌로 53	
4	2013	2	명성아파트	봉화읍 예봉로 2124	
5			서경리병행	봉화읍 내성로 50-43	
6	2016	3	수목원(1, 2, 3)	촌양면 촌양로 1501	
7	2016	4	삼영아파트 A	봉화읍 교촌길 41	
8			명성창원아파트	봉화읍 꽃동네길 25	
9			명성한빛아파트	봉화읍 교촌길 62	
10			센트레빌아파트	봉화읍 술안2길 10-12	
11	2017	4	삼영아파트(C동)	봉화읍 교촌길 41	
12			명성센시빌아파트 1차	봉화읍 교촌길 41	
13			동왕리 마을회관	봉성면 산수유길 58	
14			고선계곡 입구	소천면 구마동길 1 옆	

▲그림9.봉화군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현황 갈무리. 봉화군

마당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다.

봉화군 주민 전 씨(54세) 인터뷰

Q1. 평소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각이 안되는 거는 쓰레기 봉투 사서 담기도 하고 재활용으로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Q2. 소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쓰레기 버리기가 번거로워서 그래요. 도시처럼 주변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골이다 보니 뭐 하나를 버려도 모았다가 차로 먼까지 나가서 버리고 와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우기 수월한 것들은 강통에다 조금씩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Q3.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는 곳까진 집에서 얼마나 가야 하나요?

-> 한 3km 정도? 2km 3km?

위 인터뷰에 따르면, 봉화군 주민 전 씨의 이야기는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현황 자료만으로

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농촌 지역 쓰레기 처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봉화군에 재활용동네마당이 총 97개나 설치됐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 씨는 쓰레기 처리가 번거로워 소각이 쉬운 것들은 태우고, 소각이 어려운 것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거나 재활용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도시처럼 집 주변에 쓰레기장이 가까이 있지 않고, 쓰레기장까지 2~3km를 직접 차로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소각이라는 비효율적인 처리 방식을 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재활용 동네마당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을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개별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의 부담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남원시/옥천군 쓰레기 처리 현황

남원시 쓰레기 처리 현황

남원 지역 환경단체 ‘싱글벙글 비니루없는 점빵’에서 실시한 <남원시 읍·면 쓰레기 배출장 현황>에 따르면 남원시 전체 읍·면 367곳 중 생활쓰레기 배출장이 있는 곳은 78곳 (21.2%)에 불과하다. 영농폐기물 배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마을 가운데 50곳 (13.6%)에만 영농폐기물 배출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기준 남원시 인구는 76,000명으로 이 중 40%에 해당하는 약 30,000명의 인구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남원시의 40%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설치된 일부 배출장조차 주민 요청으로 폐쇄되거나 마을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등 행정의 계획이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존재했다. 분리배출칸 부족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칸을 추가한 경우도 있어 마을의 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설계 없이 분리배출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천군 쓰레기 처리 현황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의 경우 생활쓰레기는 마을별로 정해진 요일에 맞춰 집 앞이나 마을 입구에 배출한다. 재활용품은 수요일, 일반 쓰레기는 목요일에 수거 차량이 방문해 처리한다. 고철류와 같은 품목은 고물상 트럭을 통해 개별 처리되기도 하며, 일부 쓰레기는 외지인이 불법 투기한 채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영농폐기물은 품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 폐농약병은 세척 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인근 수거함에 배출한다. 폐비닐은 상중리나 오동리에 마련된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때 경운기나 화물

차가 이용된다. 차광막, 모종판, 토양피복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부산물은 군북면 추소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개별 운반해 처리한다. 고령자나 여성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있다.

참고 문헌

[매거진]

- 이혜빈(2025, 5). 농촌 쓰레기수거 실태(3) 마을 분리수거장, 왜 외면받을까?. 월간 옥이네, 95, 32-33.
- 이혜빈(2025, 5). 농촌 쓰레기수거 실태(1) &태우지 말라지만, 대신할 방법은요?& : 군서면 사양리, 농촌 쓰레기 수거의 오늘. 월간 옥이네, 95, 10-19.
- 한수진(2025, 5). 농촌 쓰레기수거 실태(2) 길목마다 놓인 봉투, 마을이 묻는다 : 청성면 산계1리·장연리 쓰레기를 둘러싼 풍경. 월간 옥이네, 95, 20-31.

[논문]

- 신상철, 박효준(2015). 정책보고서2015-11 :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 수시연구보고서, 2015(0), 58p.
- 한주헌, 김지영, 김태익, 박광범(2020).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농촌 생활쓰레기 및 농업폐기물 처리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151-159

[보고서 및 통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 봉화군(2025).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현황
- 산림청(2024). 산불통계연보
- 싱글벙글비니루없는점빵(2025). 남원시 읍면 쓰레기 분리배출장 현황
- 청주시(2025). 2025년 8월 읍면동 인구
- 청주시(2025). 8월 인구통계분석

7. 통계청(202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 초점집단토론 자료(1). 36p, 52p, 78p, 119, 372p, 373p, 364p, 374p.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정책 요구(2025)>
10. 한국환경공단(2023). 영농폐기물조사
11. 한국환경연구원(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12. 행정안전부(2025). 2025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13. 환경부, 한국환경공단(202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결론 작성하기

1. 산림청이 제시한 산불 발생 원인은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산림청의 통계는 쓰레기 소각을 산불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산림청의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농민의 쓰레기 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직 소방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쓰레기 소각’으로 분류되는 화재 중 일부가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소각이 아닌, 도농복합지역의 소규모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야적물 소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증명되었다. 이는 산림청의 통계가 농촌 현장의 복잡성을 다층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림청의 모호한 통계 표현은 언론 보도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산불의 주된 원인은 농민의 쓰레기 소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쓰레기 소각의 문제를 농민 개인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이 제시한 산불 발생 원인 중 ‘쓰레기 소각’은 농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타당하고 볼 수 없다.

2. 농촌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도시민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재코딩하여 비교한 결과, 농촌 주민들은 환경의식 측면에서

도시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첫째,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어보는 ‘귀하는 평소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에 대해서 농촌 주민(68.9%)과 도시민(68.3%) 모두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있다’는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오히려 농촌 주민이 근소하게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둘째,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지식 수준에서도 ‘생태계 교란생물’,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주요 환경 용어에 대한 인지율이 두 집단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고, 일부 용어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셋째, 환경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 역시 두 집단이 환경용어에 대한 OX 퀴즈에서 유사한 정답률(도시민 47.47%, 농촌 주민 45.89%)을 보였다. 질적 접근은 결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뒷받침한다. 경북 봉화군 원당 1리 마을에서 진행된 OX 퀴즈에서는 “나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 “비닐 봉지나 일회용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려고 한다”, “우리 마을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다.”와 같은 항목에 대해 모든 농촌 주민 응답자가 일관되게 ‘O(그렇다)’를 선택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와 지식이 담긴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초점집단 토론(FGI) 분석 결과에서는, 환경·경관 문제가 기대 빈도 이상으로 등장하며 농촌 주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이를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섭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질적 연구 결과들을 두고 농촌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단정적으로 낮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양적 지표와 질적 증언 모두 농촌 주민의 환경의식 수준이 도시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 현상을 단순히 농촌 주민 환경의식 부족의 결과로 볼 수 없으며, 농촌 주민의 환경의식이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3. 농촌의 쓰레기 처리는 농민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농촌 쓰레기는 도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관리 대상 면적이 마을 전체로 넓게 퍼져 있는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 도시에는 없는 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과 같은 쓰레기의 발생은 농촌 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적은 수거 장소와 낮은 수거 빈도는 농촌 쓰레기 처리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전국(지역별) 쓰레기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쓰레기 발생량보다 낮은 수거율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농폐비닐의 경우 2023년 발생량의 약 69.27%만 수거되었으며, 재활용량 또한 161,193톤으로 22년보다 10.7%나 감소하였다. 청주, 봉화, 남원, 옥천의 쓰레기 처리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처리 제도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인구가 적은 마을에선 쓰레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쓰레기 처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음을 시사한다.

〈해결방안〉

1. 행정/제도

1)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재활용 센터

농촌 지역의 경우 주택이 산재해 있어 주민들이 고정된 분리수거장에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접근성 문제가 불법 소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영농 및 생활폐기물 소각 이유로 '버리기 힘들고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54.2%,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쓰레기 처리 과정의 불편함이 불법 소각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여, 분리수거 차량이 정기적으로 집집마다 순회하며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폐기물을 정해진 곳으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물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증대시켜 불법 소각의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동식 센터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거점형 분리수거장과 긴 수거 주기는 주민들이 폐기물을 집 안에 쌓아두거나, 장기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결국 불법 소각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문형 수거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올바른 배출 방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불편함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수거 주기를 최소 주 1회 이상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다음 수거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법 소각을 선택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2) 노인 일자리 연계형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고령화 사회에서 농촌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분리수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환경 지킴이'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농촌 쓰레기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고령 인력 활용이라는 사회적 순기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참여자에게 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마을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주도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오랜 기간 마을에 거주하며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 활동할 때, 주민들은 외부에서 강제하는 규제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분리수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쓰레기 관리의 주체를 행정 당국에서 주민 자신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단순히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마을 내 폐기물 문제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과 관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접근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3) 생분해성/재활용 가능 영농자재 무료 보급제도 활성화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쓰레기 관리의 사후적 처리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쓰레기 발생 자체를 최소화함으로써 처리·수거·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농업용 폐비닐,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은 발생량이 많고 부피가 커서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이로 인해 농가에서 불법 소각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생분해성 멀칭 비닐이나 친환경 농자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생분해성 비닐이나 재활용이 용이한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가격 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에는 친환경 자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영농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토양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교육/인식개선

1)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농촌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 소각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경고나 계도성 교육은 주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시연하고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깨닫고, 쓰레기 관리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글과 함께 직관적인 그림이 삽입된 분리수거 가이드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함으로써, 글을 읽지 못하는 고령층 주민들에게 복잡한 분리수거 지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업사이클링 수업을 통해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환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2)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따른 지역화폐/마일리지 지급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제도는 단순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한 주민에게 일정액의 지역화폐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재활용 센터에 폐비닐, 폐농약 등 영농 폐기물을 반납하거나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천한 가구에 마일리지

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 특산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이 곧 소득 창출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적인 보상을 제공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상 비중을 축소하더라도 습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콘텐츠

소각소각 : 우리의 팩트체크 일대기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2025년 3월, 전국을 휩쓴 동시다발적 산불은 농촌의 쓰레기 불법 소각이라는 오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단순히 농촌 주민들의 “환경 의식 부족”으로 치부했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다.

본 다큐멘터리는 농촌 주민들의 환경 의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불법 소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팩트체크한다. 우리는 쓰레기 수거 지점의 부족, 쓰레기 수거 차량의 낮은 방문 빈도, 고령화로 인한 이동 한계,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물의 무게와 부피 등 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본다. 또한, 실제 산불 피해 지역인 봉화군에 찾아 불법소각의 흔적을 추적하고, 농촌 원주민, 귀농·귀촌민, 산불 감시원의 목소리를 담았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도시 거주민들을 만나 농촌의 현실을 전달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자 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농촌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사회적 인식을 재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아가,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불법소각이 근절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상세설명



영상은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는 주민들의 환경 의식 부족 때문이다?”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도시민들의 답변이 등장한다. 대부분은 “환경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원인은 성묘객 실화였지만, 많은 언론은 농촌 주민들의 소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과연 농촌이 정말 환경 의식이 부재한 공간인지 궁금했고,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작했다. 여러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농촌이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농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인 경상북도 봉화를 찾았다. 현장에서 환경 의식과 지식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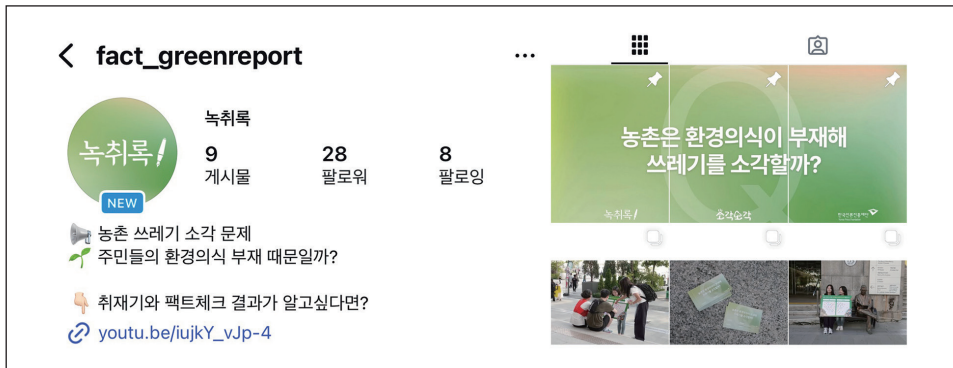
OX 퀴즈를 진행한 결과, 농촌 주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그들은 농촌이 처한 구조적인 한계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의 팩트체크 결과를 토대로 도시민들을 인터뷰했다. 앞선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농촌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농촌과 접점이 없는 도시민들은 농촌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인터뷰 과정에서 농촌이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함께 전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 홍보용 인스타그램 개설



팩트체크 결과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녹취록>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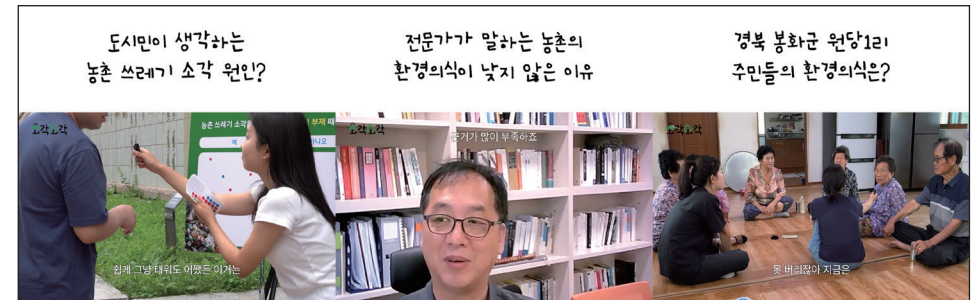
계정(@fact_greenreport)을 개설했다. 일차적으로 팀원들의 개인 계정을 활용해 <녹취록> 계정 홍보하고 팔로우를 유도했다.

2. 시민 인터뷰(설문조사) 진행 및 캠페인 명함 전달



이후 종로구 일대에서 “농촌 쓰레기 소각 문제는 주민들의 환경 의식 부족 때문이다?”라는 질문으로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며 도시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동시에, 계정 QR코드와 팩트체크 요약이 담긴 명함을 직접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계정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3. 다큐멘터리 하이라이트 릴스 제작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영상의 핵심 장면들을 릴스로 제작해 미리 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짧은 콘텐츠를 통해 관심을 환기해 전체 영상을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

4. 교내 홍보 게시판 포스터 부착

이와 함께 OO대학교 사회과학관과 인문과학관 게시판 6곳에 흥미를 끄는 포스터를 부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을 유도했다. 게시판이 건물 각 층 계단 옆에 있어, 학생



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계정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참여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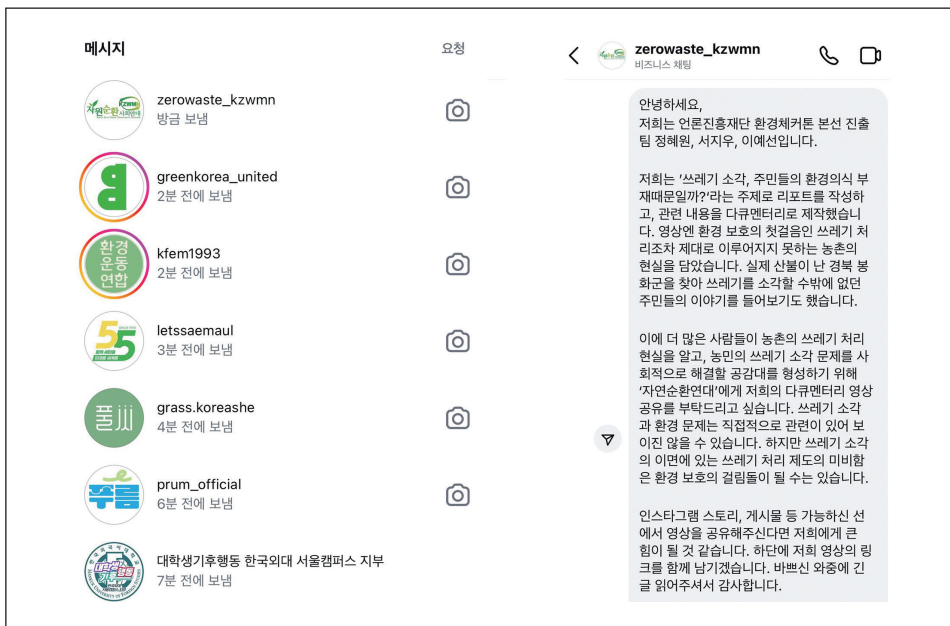
서지우

팩트체크는 하나의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판단을 유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수고스러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처음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넉넉하다 생각했으나, 제출날이 되어 소감문을 쓰고 있는 지금은 ‘조금만 더 취재하면 더욱 중요한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검색창이 닳도록 서치하고, 수백명을 인터뷰하고, 농촌 현장을 찾아가며 발로 뛰었고, 레포트도 마무리 했지만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상들은 모두 저마다의 복잡한 맥락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나의 잣대로 평가할 일이 못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취재 과정에서의 큰 기쁨은 역시나 인터뷰이었습니다. 정신 없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다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서 뜻깊은 답변과 함께 뿌듯함이 돌아오곤 합니다. 특히나 이번 취재에서는, 3주가 넘는 기나긴 요청과 끈질긴 섭외 끝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 연구원님의 인터뷰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농촌 사회를 연구할 때 특별히 지향하는 시각을 묻자, 연구원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농촌에도 늘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래밭이 하얀 판대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색의 모래알처럼 복잡하고 특별한 현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소멸되어 가는 지역 사회를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한 번의 강력한 동기부여이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즘에서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은 존재하며, 이는 ‘사실’의 조각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진실’을 논하기에 앞서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부터 그 책임감의 무게가 막중했습니다. 체커톤을 수행하며 배울 수 있었던 ‘사실의 조각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 언론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지턱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5. 환경단체 홍보 및 협업 요청



마지막으로 환경 이슈에 관심이 높은 여러 환경단체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큐멘터리 <소각 소각>의 유튜브 링크와 소개 메시지를 담아 직접 DM을 보냈다. 단순한 콘텐츠 공유를 넘어 관련 주제에 공감하는 단체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콘텐츠가 타깃 시청자층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의 자발적 2차 확산을 유도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문제 제기의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예선

체커톤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미 명시된 정보들을 다시 검증하는 것은 어쩌면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체커톤을 통해 '말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환경 문제와 함께 사회 문제까지 짚어볼 수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 팀원들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귀농을 하셔서 저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팩트체크 계획 수립, 전문가 인터뷰, 봉화 현지 방문, 그리고 리포트와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그 어떤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섭외에 실패하고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제작에 많은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요리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도구와 뛰어난 셰프가 있어도 결국 맛을 결정하는 건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과정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값지고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한 것들이 좋은 영상 소스가 되어 하나의 윤곽으로 잡히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작업이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는지는 누구보다 제작자가 잘 알기 마련이니까요. 비록 저는 영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지만, 카메라 뒤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준 팀원 지우와 혜원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무한한 격려와 빠른 피드백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친구에게 가장 고맙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전문가분들, 낯선 봉화에서 길잡이가 되어 주신 이모님, 손녀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신 봉화 주민분들, 그리고 길거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시민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이 농촌 쓰레기 불법소각의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혜원

팩트체킹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민들과 도시민들 간의 관계, 농민들과 지자체의 관계 등 농촌의 쓰레기 소각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들을 다시 정립할 때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커톤에서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사회 문제에서도 사람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팩트체커가 되길 희망합니다.

농민의 환경의식을 팩트체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의식이라는 주관적 명사를 객관적 지표로 바꾸어 팩트체크 하기 위해 팀원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선 때부터 본선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기까지 '의식을 어떻게 팩트체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저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농촌 쓰레기 문제 보도 현황, 환경의식의 다양한 정의, 농촌의 쓰레기 처리 제도 현황, 심지어는 농촌의 정의까지 찾아보며 환경의식을 팩트체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덕근 전 소방공무원과의 인터뷰로 우리가 찾던 쓰레기 소각의 맹점을 발견했을 때는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를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간 덕분에 '진실'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팩트체크를 위해 봉화에 가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선 때부터 시골에 직접 방문해 쓰레기 처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서울에서 무려 3시간이 걸리는 경상북도 봉화인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50만원의 지원금과 '직접 산불 발생 지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란 예선의 피드백을 가지고 무작정 봉화로 향했습니다. 봉화에 가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서울종합터미널로 갈 때는 약간의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막상 봉화에 가 취재를 하니 부듯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체커톤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느껴보지 못했을 감정이었습니다.

예선 접수를 했던 5월부터 최종리포트를 작성한 9월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준 지우와 예선에게 가장 고맙습니다. 각자의 일들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통계자료를 찾고, 팩트체크에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공모전을 넘어 하나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팀'처럼 느껴졌습니다. 4달 동안 저희의 팩트체크 리포트 작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까지의 4달이 농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두는 40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